

1980년대 ‘죽음’의 재현양상 연구

강소희*

목 차

1. 서론: 사건으로서의 ‘죽음’
2. 국가폭력의 정당화와 제거되는 ‘비국민’
3. 죽음의 시·공간적 보편화와 ‘열사’라는 고유명
4. 혁명의 곤경(困境) 혹은 진원(震源)으로서의 ‘빈민’
5. 결론: ‘아무도 아닌 자’의 민주화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국가폭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서의 죽음’이 재현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죽음을 둘러싼 재현의 장에 있어서 대표와 잔여를 분리·호명하는 포섭과 배제의 이중적 전략이 작동되었음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다. 하나는 당대에 생산된 기사와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성명서·추모사·발기문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지배권력과 저항세력이 80년대의 죽음을 재현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국가 공동체와 민족·민중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공동체의 주권권력을 회복·전복하려는 이들의 정치적 기획이, 죽음을 ‘비국민’과 ‘열사’로 상징화하는 전략을 고찰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 고유명에서 배제된, 죽음의 잔여를 형상화하고 있는 김소진의 소설 『열린사회와 그 적들』과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을 담은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명성, 그 6일의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배적 담론 속에서 혁명의 ‘곤경’으로 취급되었던 ‘빈민’의 존재와 이들이 꿈꾸었던 ‘민주화’의 가치에 대해 탐색했다.

주제어: 5·18, 죽음, 비국민, 열사, 빈민, 민주화, <명성, 그 6일의 기록>, 『열린사회와 그 적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 사건으로서의 ‘죽음’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는 ‘오월광주’가 원-사건으로 자리한다. 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 시위를 시작으로 27일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이 낳은 광주시민들의 죽음이 그것이다. 철저한 광주의 고립화와 언론 통제로 인해 ‘유언비어’로 존재하던 이 사건은 점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어 산 자에게 전해졌고, 이후 오월광주는 80년대 정치적 투쟁의 중심적 시공간이 되었다.

매년 오월이 되면 광주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연일 벌어졌다. 유족과 광주시민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치러지던 5·18 추모제는 83년 단계적 유화조치 이후 사면·복권된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고, 이때부터 ‘민주’를 외치는 장소마다 ‘광주의 영령들’이 호명되었다. 나아가 오월광주는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가폭력이 국민의 몸을 파괴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증언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국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열흘간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저항과 연대의 구성체는 혁명과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오월광주가 남긴 이러한 요구와 질문에 응답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한편 80년 5월 30일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기독교 회관에서 투신한 대학생 김의기와 같은 해 6월 9일 노동 3권 보장과 광주 학살에 대한 전단을 배포하다 신촌역 부근에서 분신한 노동자 김종태를 시작으로,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7년을 지나 91년 5월 투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학생과 노동자가 운동의 과정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¹⁾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국

1) 역사학과 사회학 분과에서는 대체적으로 80년대를 80년 신군부 집권에서 83년 유화조치까지, 유화조치 이후 85년 2·12 총선까지, 총선 이후 87년 6월 항쟁까지, 6월 항쟁

가폭력에 희생되는데,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은 이들의 죽음을 병사나 사고사로 은폐·조작하고, 폭력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시신을 탈취하여 매장·화장하거나 거리에 유기하는 일이 허다했다. 특히 사회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수배 중이던 노동자와 대학생이 대공과에 연행된 후 시신으로 발견되곤 했다.

이처럼 80년대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²⁾이 일상화된 '예외상태가 상례'³⁾화 된 시간이었고, 산 자들은 바로 이 죽음을 운동의 근원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구성하고 저항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80년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사회적·정치적 현상으로서, 국가폭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서의 죽음'이다. 죽음에 사건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우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의 마지막 관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죽음과 변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오월광주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죽음을 80년대의 정치적 주체들을 탄생시킨, 바디우적 의미에서의 '사건'으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⁴⁾

이후 89년 공안정국까지, 공안정국 이후 91년 5월 투쟁까지로 구분한다. (조희연,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2001.) 엄밀하게 말하면 91년 5월 투쟁은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자발적 죽음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죽음'을 저항의 동력으로 삼았던 80년식 사회운동이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역사학과 사회학에서의 시대구분에 따라 91년 5월 투쟁까지를 80년대에 포함해 다루고자 한다.

2) 추모연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열사들의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분신	투신	타살	의사	음독	활복	의문사	소계
전두환 정권 (1980~1987)	17명	6명	4명	2명	2명	0명	21명	52명
노태우 정권 (1988~1991)	36명	5명	7명	1명	2명	1명	17명	69명

자세한 내용은 추모연대 홈페이지 <http://www.yolsa.org/> 참고.

- 3)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337면.
- 4)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이란 “위치지어저 있으면서 동시에 잉여부가적이다.” 위치지어져 있다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건이 출현한다는 것이며,

주지하듯이 죽음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초과하는 대상이다. 죽음이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으로 삶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각과 경험체계의 공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은 언제나 타인의 죽음을 통한 추체험일 수밖에 없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과 언어를 통해서만 죽음은 현존하는 것이 된다. 죽음이 지닌 이러한 아포리아는 무엇보다 죽음이 재현의 대상이며, 재현된 것을 통해서만 접근가능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죽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재현의 욕망을 추동하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의 언어로 재현된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죽음에 다가선다. 따라서 80년대의 죽음에 주목하겠다는 것은 죽음의 재현과 이를 둘러싼 담론을 읽어내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 하나는 현실, 사건, 사물 등을 ‘다시(re) 나타나다(present)’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나타난 것들을 ‘대표하다(represent)’이다. 문제는 재현이 지닌 의미의 이중성, 즉 ‘나타냄’과 ‘대표함’이 종종 서로 전이되거나 착종되어 드러

잉여부가적이란 사건이 주어진 상황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의견 및 제도화된 지식과는 ‘다른 것’을 도래”시킨다는 점이다. 사건은 예측불가능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앎과 믿음을 무너뜨리며, 기존의 상징체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의 존재를, 다시 말해 ‘공백’을 기입시킨다. 한편 사건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지는 잉여적 부가물이지만, 바디우에게 있어 주체는 언제나 사건과 더불어 생성된다. 먼저 사건은 이를 대면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한다. 이에 따라 사건에서 진리를 목도하고 이에 충실하려는 자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방식과 행동방식을 발명하는 과정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 충실성의 담지자를 바디우는 ‘주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주체는 사건 이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고정된 실체의 자리를 점유하는 것도 아니다. 사건에 충실한 과정 속에서만 비로소 ‘주체’가 된다. 그리고 한 사건에 대한 주체의 충실성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따라서 진리 또한 사건 이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불변의 절대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진리는 언제나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기존의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의 존재를 선언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의 가치를 강제하는 ‘후사건적 주체의 충실성’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진리가 드러난다. 이것이 바디우의 ‘진리들의 윤리학’이 지시하는 바, 진리는 언제나 복수이며 충실성이라는 주체의 윤리적 수행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사건, 주체,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레 바디우, 『윤리학』,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53~71면 참고.

난다는 사실이다. 이때에 재현한다는 것은 '나타냄으로서 대표함' 혹은 '대표함으로 나타냄'으로 귀결되며, 이는 80년대의 죽음을 둘러싼 재현의 장에 있어서도 대표와 잔여를 분리·호명하는 포섭과 배제의 이중 전략이 작동되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한다.

하나는 당대에 생산된 기사와 민주화운동단체들의 성명서, 추모사, 발기문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80년대의 죽음이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공동체와 민족·민중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공동체의 주권 권력을 회복·전복하려는 지배권력과 저항세력의 정치적 기획이, 죽음을 몇 개의 고유명으로 고정화하는 상징전략에 주목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고유명에서 배제된, 죽음의 잔여를 형상화하고 있는 김소진의 소설 『열린사회와 그 적들』과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에서의 농성과정을 담은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명성, 그 6일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배적 담론 속에서 혁명의 곤경으로 취급되었던 '빈민'의 존재와 이들이 꿈꾸었던 '민주화'가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80년대 죽음에 관한 연구는 죽은 자들의 이름과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정리하고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기술하는 작업⁵⁾을 제외한다면, 오랜 시간 학술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는 물론 객관적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될 만큼, 80년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간적·감정적 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80년대의 죽음이 진보와 보수라는 틀 속에서 정치적 아젠다를 위한 사건으로 호명됨으로써, 강력한 정치색을 띤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 분과에서 죽음을 통해 80년대를 이해하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결과물들을 '열사'

5) 이 작업의 결과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http://ugh.kr>) 홈페이지 그리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http://www.yolsa.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 대한 연구로 묶을 수 있는데, 김원, 김정환, 천정환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김원⁶⁾은 열사의 죽음이 적대와 분노의 정념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과정을, 김정환⁷⁾은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위를 통해 열사를 정치주체의 모범으로 상징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한편 천정환⁸⁾은 노동열사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전태일의 죽음으로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진 노동자들의 ‘자살’에 주목하고, 열사의 죽음에 내포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특히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라 일어남에도 이것이 집합적 연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승고한 개인의 희생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들을 출구 없는 압박”으로 몰아가는 노동현실과 “노동운동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의 반영”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열사’에 대한 연구들은 노동자가 처한 한계상황에 대해 동일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과 전망을 80년대의 사회운동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들이다. 이는 오랜 시간 학술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죽음을 가능성을 품은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사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의 성격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80년대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80년대의 운동방식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지금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열사의 정치’는 이미 실패한 형식이며, ‘열사’란 그 과정에서 죽음에 부여된 고유명이다. 따라서 실패의 고유명을 읽는 작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죽음을 상기하는 것이 정치적 가능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유명의 잔여들, 봉인된 기억의 영역이 발견되어야

6) 김원, 「전태일 분신과 ‘노동열사’ 탄생의 정치」,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7) 김정환,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8)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대상으로」, 『문화과학』 74, 문화과학사, 2013; 「죽음과 정치, 자살의 문화정치 1·2」, 『말과 활』 4·5, 일곱번째 숲, 2014.

하며 이에 대한 작업이 계속될 때 천정환의 바람처럼 오늘날 “노동자 주체의 재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 재현된 것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죽음의 잔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라는 믿음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⁹⁾ 개별적 인물과 사건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선형적 시간 속에 배치한 결과물이 역사¹⁰⁾라면, 이렇게 서술된 역사는 우리의 공식기억과 상징체계를 공고히 하는 지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면 문학은 근본적으로 이 때끄러운 장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업이다. 문학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봉인된 사건과 잊혀진 기억들, 당대의 상징체계에서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비루하고 남루한 존재들 속으로 파고들어가, 우리의 공식기억과 상징체계의 구멍 뚫린 맨얼굴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논

9) 주지하듯이 80년대는 문학이 정치이기를, 글 쓰는 행위 또한 운동이기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문학작품에서 당대의 저항세력이 죽음을 호명하고 이를 고정화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상화가 반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운동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전형적 상황에서의 전형적 인물’의 창조가 리얼리즘의 지향으로 제시됨으로써, 문학의 서사와 형식에도 편향성과 고정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흔히 80년대를 ‘문학적 암흑기’라 말하는데, 문학이 정치에 기울어진 만큼 미학적 실험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는 일면 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문학은 그 면면을 돌아보기도 전에 혁명에 대한 냉소와 더불어 긴급한 청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또한 90년대와의 선명한 대비 속에서 당대의 문학과 담론의 흐름을 주도했던 이들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80년대 문학에도 당대의 지배적 담론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찾아 읽는 작업은 80년대를 탈90년대적 시각에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 여기에서 역사는 벤야민이 ‘보편사적 역사서술’로 지칭한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벤야민에게 역사와 과거는 두 가지로 계열화된다. 이미 썩어진 역사와 아직 썩어지지 않은 역사 그리고 승리자들의 시간과 억눌린 자들의 시간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보편사적 역사서술과 유물론적 역사서술로 지칭되는데, 전자는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승리자의 사실 더미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후자는 이 기록들을 거슬러 술질하며 그 속에 묻혀 있는 억압받은 자들의 시간을 포착하고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른바 ‘대항역사’로 불리는 일련의 작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발터 벤야민, 앞의 책, 336면.

문은 80년대의 죽음이 어떻게 포섭과 배제의 이중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배제된 죽음과 그 속에 담긴 꿈이 형상화된 문학적 파편들을 찾아 읽음으로써, 80년대에 대한 지배적 담론과 기억에 새로운 분절화를 일으킬 계기를 발견하려는 시도의 첫걸음이다.

2. 국가폭력의 정당화와 제거되는 ‘비국민’

1980년대는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공백과 대면한 시대였다. 특히 국가폭력이 일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신군부의 정당성에 통합할 수 없는 균열을 가져왔으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때 죽음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존하는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구성하려는,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 곧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군부가 생산했던 5·18 담론의 상징전략은 바로 국가폭력의 정당화였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행사했는가’하는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쟁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를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 무력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사된 정당한 폭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군부의 5·18 재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과 무력으로 제압해야 할 대상을 구별하는 것, 즉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침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

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여 난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극한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며 사태의 악화는 국가 민족의 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순수한 여러분의 애국충정과 애항심이 이들의 책동에 현혹되거나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파탄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질서유지에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지역의 평화적 번영을 위하여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¹¹⁾

처음으로 신군부가 국민의 경계 밖으로 밀어낸 대상은 '깡패와 불량배 등 현실불만세력'이다. 인용문은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첫 번째 담화문으로, 이는 오전 방송을 통해 발표했던 것을 수정해 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오전 발표에서는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현실불만세력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트린데 기인”한다며, ‘학생과 깡패’를 5·18의 핵심집단으로 동시에 지목했다.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담화문에는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깡패·불량배의 폭력적인 난동을 구분하고, 불량세력의 선동에 의해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으로 수정된다.¹²⁾ 그리고 이러한 학생과 폭도의 구분은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다수의 선한 국민과 소수의 악한 폭도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신군부의 첫 번째 상징전략은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수 폭도들의 사건으로 5·18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의 틀 속에서

11) 『계엄사령관 이희성 담화문(1980.05.21)』,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풀빛, 1990, 58면.

12)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2, 44면.

계엄군의 폭력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 폭도들을 향해 불가피하게 행사된 정당한 무력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에 5·18의 핵심세력으로 지목되었던 ‘현실불만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로 물러나는 양상을 보인다. 왜냐하면 소수 폭도들에 의한 사건이라는 재현은 5·18이 광주시민의 항쟁으로 확장됨으로써 설득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민을 움직이게 만든 원인, 즉 ‘지역감정’과 ‘배후세력’을 발명하는 것이 신군부의 두 번째 전략이었다.

이희성이 31일에 발표한 담화문에는 처음에 언급되지 않았던 두 인물이 5·18의 배후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는데, 바로 간첩 이창용과 정치인 김대중이다.¹³⁾ 남파간첩 이창용으로 제시된 북괴의 고첩과 이에 협력하는 불순분자들, 그리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김대중을 ‘광주폭동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것이다. ‘불순분자 및 고첩’은 사건 발생에서부터 줄곧 비국민으로 지목된 대상이었다.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중심적 타자로 자리하게 했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벌어질 때마다 북한과 간첩의 존재를 부각시켜 위기를 유보하고, 북에 대한 적의를 고취시키는 반공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당시 ‘북한’을 국민의 타자로 설정하는 구도는 익숙하고도 유효한 것이었다. 간첩 이창용의 등장은 신군부가 주동세력의 한 축으로 지목한 ‘불순분자’에

13)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종과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지역 시민들의 지역감정을 촉발, 흥분시킴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군중심리의 폭발로 유도하여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데에는 첫째, 북괴의 고첩과 이에 협력하는 불순위해분자들의 책동으로서 전남 남해안을 통해 상륙침투하여 광주일원에서 활동타가 서울로 잠입, 공작임무를 확산시키려다 23일 검거된 남파간첩 이창용의 그간 필답심문에 의한 진술과 당국에 포착된 몇 가지 징후가 일치 실증되었으며 둘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소요사태를 배후 조종해 온 김대중이 광주시의 전남대와 조선대 내 추종학생들을 조종, 선동하여 온 것이 소요사태의 발단이 되었고, 사태의 악화와 폭동화 과정에서 광주시내 골수추종분자들이 단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판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담화문』, 『경향신문』, 1980.05.31.

이름과 사건의 경위를 실재하는 것처럼 부여해 빈약한 설득력을 메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주 학생과 시민을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으로 마지막에 지목되는 인물이 김대중이다.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김대중은 “8·15해방 후 좌익 활동에 가담한 공산주의자이며, 근래에 북괴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불순분자와 접촉하는 등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동을 자행”¹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군부 입장에서는 ‘비국민’으로 지목할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었다. 또한 전라도 차별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설움이 독재정권 하에서 김대중이 겪은 정치적 수난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은, 광주시민의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 ‘감정’과 대비되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냉철한 이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흥분과 광기에 가까운 군중심리의 폭발’이 불러온 사태로,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여 질서유지에 앞장서’라는 것이 계엄사에서 반복해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감정과 이성의 구분은 정당한 공권력의 적용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자만이 ‘국민’의 영역에 안전하게 자리할 수 있으며, 과도한 감정이나 흥분 상태에서 행동하는 자는 언제나 공동체 밖으로 배제되어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군부의 최종적 입장을 담은 31일 담화문은 5·18을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선동된 광주시민의 군중심리가 폭발한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자발적 참여자들이었던 광주시민을 비이성적·비정치적·비주체적 존재로 재현해낸다. 이는 국가폭력에 의해 죽어간 광주시민을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제거함으로써 신군부의 폭력과 전두환

14)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37명 내란음모 혐의』, 『경향신문』, 1980.07.04.

정권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상징화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 방식은 이후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죽음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도와 논리로 반복·적용된다.

특히 분신과 투신 등 자발적 죽음에 대해 정부는 사회의 부적응자 혹은 정신이상자 몇몇의 잘못된 선택이거나, ‘좌경용공으로 의식화된 소수’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기사화하면서 선한 다수와 악한 소수의 구분을 반복한다. 그리고 여기에 죽음의 배후세력이 있다는 논리가 다시 덧붙여진다.¹⁵⁾ 이는 특히 91년 5월 투쟁에서 정점에 달하는데,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분신이 계속되자 정부는 서강대 박홍 총장을 통해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전에 죽음을 조작하고 죽을 자의 명단을 작성한 세력이 있으며, “사상과 행동의 혼돈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거짓 이념과 영웅 환상을 고취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는”¹⁶⁾ 지금과 같은 연이은 분신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지배권력의 이와 같은 재현은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바우만은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를 빌어 인류의 역사에서 공동체의 타자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뺄어내는 전략’과 ‘먹어치우는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전략은 교정할 수 없을 만큼 낮설고 이질적인 타자를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전략은 타자의 이질성을 교정하여 타자성 자체를 유예하거나 무효화한 후 공동체에 편입시키는 것이다.¹⁷⁾ 80년대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사회

15) 대표적인 사례로 86년에 연이어 일어난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등의 죽음에 대해 민통령 의장 문익환을 배후세력으로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좌경용공세력의 핵심조직인 민통령의 문익환 의장은 (...) 좌경운동권 학생들이 주도한 학원의 불법집회에 직접 참석, 이들을 선동하고 극렬소요를 유발함으로써 학원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급기야는 감성적인 학생을 분신자살토록 하는 무책임한 행위까지 야기하였다.” 『민주화 위장, 복괴노선 수용』, 『경향신문』, 1986.11.13.

16) 『죽음에 배후세력 있다』, 『조선일보』, 1991.05.10.

17)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수일 옮김, 도서출판 강, 2009, 164~165면.

의 보편적 인증을 획득했던 시대였던 만큼, 이들 모두를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구분되어야 했다.

다수의 시민과 학생은 단지 '혼돈과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을 뿐, 죄가 있다면 그들에게 '거짓 이념과 영웅 환상'을 고취시킨 소수의 좌경용공 세력에게 있으며, 시민과 학생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안녕과 질서'의 상태로 이르면 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분신자살 기도 사건은 (...)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있음이 원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¹⁸⁾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정치적 주장의 제물로 바친 데 대해서도 찬동할 수 없다. 생명의 외경을 제대로 못 가르친 기성세대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식의 죽음 앞에 실신한 부모의 심정으로 함께 오열하고 싶은 심정이다."¹⁹⁾

이렇게 지배권력의 담론 속에서 자발적 죽음은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지 못한 젊은이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그려지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기성세대 전체에게로 돌려진다. 이들의 죽음에서 독재와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의 정신이,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에의 꿈이 먹어치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과 학생은 공동체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하게 된다. 반면 진짜 죄는 다수를 배후에서 조종한 악한 소수에게 물어진다. 지배권력은 병리학적 진단에 힘입어 이들을 '암세포', '전염병균'으로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²⁰⁾ 하나의 신체와 같은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유지

18) 「인간의 생명은 모든 가치 위에 있는 것」, 『동아일보』, 1986.05.21.

19) 「과격은 민주화에 역행: 분신점거 선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아일보』, 1986.05.22.

20) "소수가 다수의 침묵 아래 공공연히 좌경선명성경쟁을 벌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그동안의 학생운동에 대한 어설픈 관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19 이후 우리 사회에는 데모를 「때 묻지 않은 학생들이 현실비판에 나선 의로운 행위」로만 보아왔던 게 일 반적인 풍조였다. 웬만한 학원폭력이나 케도 이탈 정도는 방법론상의 문제 정도로 눈감 아 준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이 오늘의 중병이 되었다. (...) 「이 땅의 자경용공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암이나 병균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외부로 사회의 암적 존재들은 뱉어내지며, 이때 국가폭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당화된다.

3. 죽음의 시·공간적 보편화와 ‘열사’라는 고유명

지배권력이 5·18을 악한 소수에 국한된 사건으로 재현했다면, 저항세력은 이에 대항하여 오월광주에서의 죽음을 보편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것은 시·공간의 두 방향성을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시간적으로는 5·18을 이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함으로써 민족의 수난사에 위치시키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광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과 긴밀히 연관된 죽음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공동체와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려는 저항세력의 핵심적인 상징전략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슬퍼해야 하는 것은 그날이 ‘추억’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방이 우리의 현재의 일상이 아니고 간직해야 할 과거의 추억이며 다시 기록해야 할 미래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해방 39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가장 반해방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 거대한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걸머지고 나가야 할 우리가 선열들에게 빚지고 있는 커다란 부끄러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이후 패권주의 제 세력이 그 하수인인 국내 매관세력과 다시 손을 잡고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동안 민족분단이 있었고,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민중의 궁핍이 있었고, 자율적 생산구조의 절멸이 있었고, 매관정권의 이름만 바꾼 교체가 있었으며, 4·19와 5·16이 있었고, 10·26이 있었고, 그리고 광주항쟁과 그 짓밟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의 의

는 단호하며 어느 선까지 침묵했던 다수도 마침내 결집, 암세포를 스스로 제거할 것이다, 는 다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다수의 침묵과 어설픈 관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좌경을 직시하자⑥ 오염되는 대학』, 『경향신문』, 1986.10.22.

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신식민주의, 지금도 우리 앞에 최대의 질곡으로
 엄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해방 없는
 해방 기념일, 그것이 오늘입니다.²¹⁾

인용문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이 출범²²⁾한 후 처음으로 8·
 15를 맞아 발표한 기념사인데, 여기에는 당시 대학생들 비롯한 지식인이 한국
 의 현대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통된 인식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해방 후
 우리가 걸어온 길은 '실패한 역사'이며, 따라서 '진정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이 글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외세의 압력과 국내 매관세력으로 인해 결국 '분단'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짊어지게 되었고, 이후 "매관정권의 이름만 바꾼" 이승만과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됨으로써 다수의 민중이 착취·탄압당하는 수난이 계속되었다. 해방
 직후와 4월 혁명 그리고 80년 민주화의 봄은 우리의 빛나간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었으나, 그 중요한 시기마다 반동의 도래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민중은 반복적으로 패배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5·18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다. 그것은 민중의 패배가
 반복되었던 현대사의 당연한 귀결이며, 가능성의 시기에 역사를 바로잡지

21)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여! 민족해방의 참다운 뜻이여! - 8·15해방 39주년 기념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2』,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447~448면.

22) 83년 9월 30일, 김근태와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인사들과 60명에 가까운 청년이 모여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며 민청련의 출범식을 갖는다. 다음은 김근태 의장에 의해 낭독된 창립선언문의 일부본이다. "오늘의 이 모임은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통해 성장 발전해온 운동역량의 값진 결실이며, 특히 저 80년 5월의 피맺힌 민중항쟁에서 솟아오르는 운동역량의 결단이다. 우리는 동학농민전쟁 이래 면면히 지속되어 온 항일민족해방투쟁, 4·19 민주혁명, 5월 민중항쟁의 반식민, 반봉건, 반독재 민족운동의 횃불을 이어받으려 하며, 도도한 역사적 흐름으로써의 인간 해방과 세계 인류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고난에 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에게는 사랑과 신뢰가 있기에 민중 지지와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승리에 대한 확신과 치열성이 있기에 당당함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만세! 민주화운동 승리 만세!" 『민주, 민중, 민족 통일을 우리 모두에게』, 앞의 책, 1997, 328~329면.

못해 벌어진 커다란 희생이다. 따라서 5·18이라는 사건과 광주시민의 죽음은 반동의 도래를 막아내지 못했던, 역사를 바로잡지 못했던 우리들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 그리고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해방 없는 해방 기념일”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며, ‘해방’은 함께 싸워서 이룩해야 할 ‘미래의 목표’로 주어진다.

이렇게 5·18을 민족의 수난사로 해석하면서 ‘진정한 해방’을 투쟁의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먼저 저항세력이 구성하려는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된다.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진단은 5·18과 식민지적 기억을 연결함으로써, 민족을 탄압했던 일본의 자리에 전두환 정권을 위치시킨다. 민족의 적이었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중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세력으로써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5·18을 일으켰던 신군부의 배후에 이를 승인하고 지원했던 미국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미·소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의 기억과 연결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위치가 재설정된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친구’였던 미국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세력으로써 공동체의 적으로 밀려나는 한편, 분단 이후 줄곧 ‘국민’의 타자로 자리했던 북한은 다시 만날 하나의 ‘민족’으로써 공동체 안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민의 죽음을 실패한 역사의 필연적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민중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실패의 역사를 승리로 전복시킬 정치적 주체를 호명하기 위한 전략이다. “수난사적 역사인식은 결핍과 결여태로서 자신을 정립하면서 동시에 복원과 재생의 의지를 통한 주체의 재정립”이라는 열망의 표현이다. 즉 수난사에는 “재생을 통한 대주체로의 거듭남이라는 욕망”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²³⁾

23) 권명아,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150면.

광주는 죽지 않았다. 그날의 함성도 그치지 않았다. (...) 지금도 광주 어느 산기슭에 버려져 있을 열한 살 어린 소년의 차마 감지 못한 두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폭력 정권에 맞서 움켜쥔 조그만 두 주먹이 지하에서 부르르 떨고 있을 지금, 이제 우리는 더이상 폭력에 대한 공포와 좌절감에만 있을 수는 없다. 아직도 초연이 가지지 않은 광주 영령들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선언한다. 군부의 폭력 앞에 무수한 민주시민들이 쓰러져 간 80년 5월 광주에서부터 이 땅의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또 그때 흘린 피로 다져진 이 땅의 민주화운동에 살아있는 우리가 새 깃발을 드높일 것임을. (...) 우리는 80년 5월의 불꽃속에서 투혼을 안고 태어난 광주의 아들딸들이어야 한다. (...) 역사는 소시민적 안락함과 방관자적 논평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끊임없는 실천만이 수천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과 죽음으로 얼룩진 5월을 승리, 평화의 5월로 부활시킬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헌신만이 그들의 참혹한 시신 아래 묻혀버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푸른 하늘 아래 꽃 피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민주화운동 승리 만세!²⁴⁾

인용문은 5·18 추모대회에서 낭독된 민청련의 추모사인데, 이 글은 5·18을 보편화함으로써 집회에 모인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는 저항세력의 상징전략을 잘 보여준다. “광주는 죽지 않았다”는 첫 문장은 ‘80년 오월광주’를 당시 살아있는 자들의 시공간과 연결하는 강력한 선언이다. 광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처참히 죽어간 자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으로 살아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은 광주시민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이 땅에 살인적 군사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 가족에, 우리 이웃에, 우리 민족에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이 존속하는 한 5·18은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으며, 현정권의 폭력성을 여실히 증언하는 동시대적 사건으로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어서 “열한 살 어린 소년”의 서사가 제시된다. ‘민주’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어린 소년이 독재에 맞서 싸우다 산기슭 어딘가에 주검으로 버려져

24) 『아, 5월이여!, 광주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 앞의 책, 1997, 411~414면.

있으며, 아직도 조그만 주먹을 풀지 못한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죽음의 서사. 이로 인해 “광주는 죽지 않았다”는 문장은 강력한 수행문적 성격 을 갖는다. 국가폭력이 낳은 참혹한 이야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그곳에 모인 이들은 ‘오월광주’의 역사적 목격자이자 증언자가 된다. 또한 소년의 “못다 이룬 꿈을 언젠가” 이루기 위해 이제 자신의 주먹을 움켜쥐고 투쟁을 이어 가야한다는 해원(解冤)의 과제를 받은 자가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자들은 “광주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진정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5·18을 시·공간적으로 보편화하면서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실천을 요구하는 담론전략은 80년대에 생산된 수많은 발기문, 선언문, 성명서, 추모사 등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다.²⁵⁾ 민청련 이후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 질 때마다 어김없이 ‘5월의 영령들’을 부르며 출범했고, ‘우리의 뛰는 심장 과 숨 쉬는 공기’ 속에 ‘먼저 가신님의 원한과 꿈’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님의 원한을 풀고 꿈을 이룰 투쟁을 살아있는 우리가 이어

25) 이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난 글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人鬼가 공생하는 오늘 의 음험한 역사의 비탈길에서 분명 님들은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뛰노는 심장과 숨 쉬는 공기 속에 이 모든 맡은 님을 대신하고 함께하는 역사적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 죽은 자의 원한 위에 산 자의 분노를 더하여 그 피눈물을 폭탄삼아 민중 승리의 그 날까지 이 땅의 수많은 적들과 순수한 민주적 민족적 투쟁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이 땅의 어둠을 사루고 찬란한 내일의 새벽을 고할 태양이 되어 오시면 우리 맨발로 나아가 맞을 민주와 통일의 그 날에 우리 한번 얼싸안고 춤출 찬란한 꽃발을 이루어주소서.” 광주의거주족회회장 전계량, 『5·18 4주기 추모사』, 84.05.18, 앞의 책, 1997, 404~405면; “5월의 영령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 뜻깊은 모임에서,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와 통일의 의지를 이어받아 굳세게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5월의 향불, 항쟁의 향불, 당신들의 한을 달래는 향불 그리고 빛과 희망의 향불을 당신들의 영전에 바칩니다. 민주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채찍질 하소서! 온 겨레가 얼싸안고 춤추는 그 날 고이고이 잠드소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문익환, 『5월의 영령들이시여!: 5·18 5주기 추모대회사』, 85.05.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 참고.

갈 것이라는 다짐과 승리의 그 날까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보호하시라'는 기원 등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한편 국가와 자본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은 자들을 정치적 주체의 전형으로, 나아가 인간 존재의 전범으로 제시하는 담론이 구성된다. 폭력이 횡행한 이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저항세력은 '정의로웠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의 삶을 호출했던 것이다.²⁶⁾ 이른바 '열사'로 명명되는 이들의 삶, 즉 목숨을 건 투쟁과 못다 이룬 꿈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의 존재론적 서사'가 구성되었고, 이것이 윤리적 인간의 전형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80년대 정치적 주체들은 집회의 장소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를 통해 우리의 투쟁은 열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싸움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삶에서 투쟁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열사와 닮아가기를 회구했던 것이다. 특히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은 87년 6월 9일, 전 국민이 애도에 동참했던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이다.

오전 7시 이군의 관이 동료학우들의 손에 들려 추도식장에 안치되고 영결예배가 진행되었다. 전날 교도소에서 석방된 문익환 목사는 양심수 대표로 단상에 나와 “전태일 열사여”를 시작으로 민주열사들의 이름을 부른 뒤 마지막으로 “이한열 열사여”를 외치며 통곡했고, 일순간의 고요를 깨고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낮 12시경 이군의 관을 실은 운구차와 함께 운구행렬이 시

26) 대표적인 인물로 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전태일을 들 수 있다. “전태일 동지시여, 그칠 줄 모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선구자이신 영원한 투사시여! (...) 당신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 당신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역사는 민주적인 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에 의해 발전된다는 것을 (...) 피 묻은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태일 열사, 당신은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새롭게 돌아와 있습니다. (...) 이 땅의 모든 민주시민의 민주회의 제단 앞에, 당신은 새로운 전태일의 신화를, 터져 나오는 울분과 고통의 폭탄선언을 입에 악물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여기 살아 있습니다.” 민중덕, 『전태일 동지여 민주화여』, 83.11.13, 앞의 홈페이지.

청에 도착할 때쯤 100만에 이르는 시민·학생들이 시청광장에 모였고, “살인정권과 타협 없다. 끝까지 투쟁하자” 등의 구호와 함께 치켜든 주먹과 북소리, 흔들어 대는 만장과 피켓, 이에 맞춘 박수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오후 8시쯤 대형 태극기로 덮힌 운구차가 광주시 금남로에 나타나자 “한열아! 한열아!” 하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50만에 가까운 광주시민들이 장지로 향하는 운구차를 따라 끝없는 행렬을 이루었다. 도청에서 망월동에 이르는 30리 길을 따르는 시민들은 마치 7년 전 광주민중항쟁 때 시민들이 출정하던 장면을 재현하듯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등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민주쟁취”,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장지로 행했다.²⁷⁾

80년대 대중집회의 대표적인 형식은 노제와 추모제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공식적인 애도가 금지된 상황 속에서, 거리에서 치러지는 장례나 광장에서 진행되는 추모의 의례는 그 자체로 국가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행위가 되었다. 문익환 목사의 추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집회 현장에서 죽은 이들은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로 재현된다. 그리고 전태일로부터 광주 2천여 영령을 지나 이한열에 이르기까지 열사들의 이름²⁸⁾을 외쳤던 추도의 방식은 이후 유사하게 반복되며 대중집회의 고정된 절차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²⁹⁾

국가폭력에 의해 죽어간 이들에게 ‘열사’라는 상징적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호명함으로써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이러한 의식은 집회의 성격과 그곳

27) 인용문은 『이한열군 전국민의 애도 속에 잠들다』, 『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87.08, 94~101면 기사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28) 문익환 목사가 불렀던 열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태훈 열사여! 황정하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김세진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이동수 열사여! 김경숙 열사여! 진성일 열사여! 강성철 열사여! 송광영 열사여! 박영진 열사여! 광주 2천여 영령이여! 박영두 열사여! 김종태 열사여! 박혜정 열사여! 표정두 열사여! 황보영국 열사여! 박종만 열사여! 홍기일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우중원 열사여! 김용권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29) 노제에서 재현되는 ‘열사’에 대해서는 김재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2~45면 참고.

에 모인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규정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를 통해 집회에 모인 이들은 열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애도의 공동체로 묶이며, 동시에 죽음으로도 이루지 못한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을 지속하는 정치적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후 이어지는 가두행진은 확인된 정체성을 실천하는 투쟁의 한 형식이다. 독재와 자본에 대항하는 '민주'와 '노동'의 구호를 외치며, 운구차에 실린 죽은 자의 뒤를 따라 걷는 행위는 그대로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³⁰⁾는 열사들의 말 없는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는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 정치적 행위로 연결되는, 장례와 추모가 곧 저항과 투쟁이었던 80년대식 사회운동의 특이성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생신된 수많은 구호와 운동가요, 만장과 걸개그림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재현 방식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열사와 함께 싸우는 이들의 공동체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정치적 실천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호명함으로써 '87년 광장'으로 불러들였던 이한열의 장례식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더불어 6월 항쟁의 최대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87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시위에 동참함으로써 오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적 절차를 얻는 데 성공한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는 국가폭력에 의한 타인의 죽음이 한 개인을 정치적 참여의 주체로 전이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 나아가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현실 정치의 실제적 변화를 이끄는 힘을 지녔던 시

30)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곡은 5·18 당시 시민군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27일 도청을 사수하다 희생된 윤상원과 들불야학을 창설해 활동하다 78년 12월 불의의 사고로 숨진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추모 헌정가이다. 작곡은 김종률, 작사는 백기완의 시 『뫼비우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황석영의 주도아래 두 사람을 위한 '노래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젊은 재야운동가 10여 명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영혼결혼식이 거행된 82년 2월 20일 망월동 묘역에서 처음 불러졌던 이 노래는 점차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거의 모든 대중집회 현장에서 불러질 만큼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근식, 『임을 위한 행진곡 - 1980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08, 252~277면 참고.

대였다고 할 수 있다.

4. 혁명의 곤경(困境) 혹은 진원(震源)으로서의 ‘빈민’

6월 항쟁의 결과 6·2선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광장에서 수없이 외쳤던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현실화된다. 이는 4·19 혁명부터 꾸준히 전개되었던 사회운동의 치열한 투쟁과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이뤄낸 쾌거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2선언에는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으며, 시민들이 이루어낸 항쟁의 모든 성과는 대선을 향한 양김에게 바쳐졌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은 제도정치권으로 넘어간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이 이뤄낸 87년 체제는 눈부신 승리인 동시에 분명한 패배의 지점을 껴안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87년부터 91년 사이의 한국 사회, 특히 민주화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운동권 내부의 분열과 이들의 담론 속에 내재하는 배제의 논리이다. 이는 80년대의 정치적 주체들을 비판하거나 6월 항쟁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공간을 ‘거슬러 읽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명성 그 6일의 기록>과 김소진의 소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각각 87년 6월 항쟁과 91년 5월 투쟁을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에 존재하던 균열의 지점과 배제의 논리를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먼저 <명성 그 6일의 기록>은 6월 10일 밤 시위를 하던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에 쫓겨 우연히 명동성당에 모이게 되면서 시작된 농성투쟁이 어떤 내부적 갈등 과정을 거쳐 15일 정오 돌연 해산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명동언덕으로 모여든 학생과 시민들은 성당 주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성당 앞마당에서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5·18광주항쟁부터 4·13 호헌조치까지 전두환 정권의 최악이 성토되는 가운데, 농성을 계속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집행부도 꾸려졌다. 다음날 오전 농성대는 전두환

과 노태우의 화형식을 거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경찰과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성당 주변을 봉쇄하고 농성대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와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서대협)는 '무질서와 폭력성'을 이유로 농성대를 해산하라는 의견을 전해온다. 6월 항쟁의 지도부였던 국본과 서대협은 급진적 슬로건을 내건 폭력적 거리 투쟁은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개헌'을 중심의제로 설정하고, 평화적 비폭력 투쟁을 전개했는데, 농성대의 "무질서와 폭력 투쟁이 대중과 운동권을 괴리시킬 수 있다는 우려"(당시 국본의 정책실 차장 황인성의 인터뷰)에서 해산을 명령했던 것이다.

농성 사흘째인 12일이 되자 그 수가 급격히 줄어 400명 정도의 인원만이 명동성당에 남게 되었고, 이들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던 바리케이드 또한 성당측의 권유로 철거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명동성당 주변에 이른바 '넥타이부대'가 집결해 대중집회를 이어갔고,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의 외연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시위가 대규모로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자 노태우는 명동성당을 찾아와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와 함께 그동안 농성대를 보호하며 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크게 분노하던 천주교단 또한 해산을 요구해온다. 당시 서울대학교 홍보국장이었던 함세웅 신부가 정부와 대표로 협상한 끝에 농성자의 안전 귀가와 15일 농성대 해산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14일 오후 6시에 진행된 지도부 회의와 새벽 1시에 재개된 조별토론 결과 해산 4개조, 지속 17개조로 '농성을 계속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후 계엄령 투입의 가능성을 역설했던 함세웅 신부의 연설과 전체 농성대원을 대상으로 한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213명중 119명의 찬성으로 해산이 결정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87년 6월 10-15일의 명동성당'이라는 이 시공간에 80년대의 정치적 주체들이 꿈꾸었던 '민주화'에 대한 서로 다른 열망이 파편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80년대 민주화운동

에는 ‘정치의 민주화’가 중심의제로 놓여 있었다. 독재정권이 한국사회 전반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민주화 없이는 그 어떤 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내내 정치적 주체들이 불렀던 ‘민주’에는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의 의제 또한 담겨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노동 3권 보장’과 ‘민중의 생존권 보장’은 민주화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상관없이 80년대의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던 것이었고, 6월 항쟁 당시에도 이 구호는 거리 곳곳에서 외쳐졌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선제’에는 담길 수 없는 또 다른 민주화에 대한 꿈이, 그동안 정치적 주체들이 그려왔던 ‘인간다운 삶’의 풍경이 존재했던 것이다.

전 34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토지를 평당 3천원에 팔아먹고 고향에서 쫓겨 온 이농민입니다. 제가 깨울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독재정권에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이 분노가 어디 이 농민만의 분노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이름 석자도 변변히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요, 학생입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고, 경상도 전라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같이 단결하였던 것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서나 정의와 양심이 처음부터 다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정의롭다면 그 정의로운 소수가 역사를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³¹⁾

인용문은 6월 11일 농성대에 합류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온 이천재 할아버지가 대중집회에서 했던 연설의 내용이다. “34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토지를 평당 3천원에 팔아먹고 고향에서 쫓겨 온 이농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사람의 분노는 ‘독재정권’과 ‘자본주의’ 두 대상을 나란

31) 김동원, <명성 그 6일의 기록>, 푸른영상, 1997, 33:15 ~34:42.”

히 향해 있다. 그에게 독재정권과 자본주의는 분리되지 않는 모순구조이며, 따라서 그가 꿈꾸는 민주화는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가 서는 세상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한 것이다.

6월 10일 농성대가 모이기 전, 명동성당에는 상계동 철거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이들은 국본과 서대협 등 항쟁의 지도부와 성당측에서 해산을 요구할 때 유일하게 농성대를 응원했던, “철거민들은 농성대의 보호자이자 동지”였다. 철거민들은 가지고 있던 식량을 털어 농성대의 식사를 책임졌고, 생활하던 천막을 농성대원을 위한 잠자리이자 치료소로 제공했다. 이는 상계동 철거민들이 꿈꾸던 민주화가 이천재 할아버지의 민주화와 다르지 않으며, 또한 천막농성을 하며 그리던 세상이 농성대가 투쟁으로 이룩하려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동원 감독은 87년 6월 명동성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명동농성에 자부심과 함께 강한 아쉬움을 갖고 있고 특히 해산과정에 대해 한결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약 해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한다. “역사의 가정이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아쉬움과 의문들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그때의 치열한 아름다움에 비해 지금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만 하며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³²⁾이라는 것이다. 그 의문에 대해 이 영화가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87년 6월 명동성당에 있었던 자들이 꿈꾸었던 민주화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구두땀이에서 비구니까지 성별과 나이, 계층과 이념을 초월해 오직 민주화의 염원으로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파편화된 풍경으로 복원되어 있다. 그것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천재 할아버지와 상계동 철

32) 김동원, 『<명성 그 6일의 기록> 연출의도』, 다음 영화 홈페이지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37305>

거민처럼 삶의 터전을 잃고 6월 항쟁으로부터도 주변화된 ‘빈민의 민주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다.

농성대의 해산 결정 이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개헌’이라는 하나의 이슈로 수렴되면서, 80년대 같은 길을 걸었던 사회운동은 두 계열로 분리된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적 절차의 획득을 사회운동의 승리로 평가하며 이제 이전의 투쟁 방식은 버려야 한다는 노선과 아직 민중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며 따라서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노선이 그것이다.

이 두 번째 주장이 6월 항쟁 직후인 7-8월에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폭발적으로 발산되는데, 국가는 전과 다름없이 공권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고, 결국 8월 22일 옥포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가두시위 현장에서 이석규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다. 이는 절차적 민주화 외에는 변한 것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언론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좌경 용공 세력이 개입된 폭력’이라 왜곡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기업주들은 휴폐업 조치로 시간을 끌었으며, 정치권을 비롯한 재야민주세력은 대권을 향한 양김의 경쟁에 몰두해 있었고, 6월 항쟁의 중추였던 ‘넥타이 부대’는 그들의 일상으로 복귀한 뒤였다. 그렇게 노동자 대투쟁은 9월을 기점으로 점차 사르라 들고, 그해 12월 16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투쟁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절차적 민주주의 앞에서 ‘민주’라는 단어 자체가 힘을 잃어 갔다. 특히 91년 5월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유서대필 사건’과 ‘외대 사건’³³⁾으

33) ‘유서 대필 사건’은 91년 5월투쟁의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분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8일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그의 친구였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을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처벌한 사건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언론은 이를 사실로 몰아갔고, 결국 강기훈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살았다. 그러나 2014년 2월 13일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로 인해 운동하는 자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으로써 '운동' 또한 이전과 같이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힘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죽음의 굶판을 걷어치워라”³⁴⁾는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죽음을 저항의 근원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주도했던 80년대식 사회운동은 막을 내린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정상화 담론'이다. 군사독재는 종식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는 성취되었다. 이제 국가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이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이므로, 국가를 적으로 투쟁하던 시민들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일상을 정상화하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91년 5월 투쟁을 배경으로, 정상화된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사회운동의 구성원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빈민의 상황을 한 '밥풀때기'의 죽음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다. 다음 날인 27일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고, 이를 시작으로 규탄대회와 가두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지도부가 철수하는 6월 26일까지 총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서도 무혐의·무죄 판결을 내렸다. '외대 사건'은 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당에서 당시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되어 교수직을 사퇴하는 정원식에게 계란, 밀가루 등을 집단으로 투척한 사건으로, 이는 정원식이 전두환 정권에서 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전교조 인사들의 구속과 불이익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학생들의 집단 반발이었다. 당시 언론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는 비난을 일제히 쏟아냈고, 이는 '유서대필 사건'과 함께 사회운동세력 전체의 도덕성이 매도되는 결과를 낳았다. 김정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91년 5월 투쟁을 소멸시킨 외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환, 『대중과 폭력 - 1991년 5월의 기억』, 도서출판 이후, 1998, 60~64면 참고.

34) 이는 김지하가 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기고문 『짧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의 부제이다. 글의 주요 논지가 드러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짧은 벗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끼치는 의사गत을 당장 걷어 치워라. 영육이 합일된 당신들 자신의 신명, 곧 생명을 공경하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행동을 선택하라.”

13명의 학생과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5월 26일 시위 도중 강경진압에 의해 사망한 김귀정의 시신을 두고 백병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담고 있다.

백병원에는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집행한다는 명목하에 김귀정의 시신을 탈취하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수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수대에는 대책위를 비롯한 운동권 학생과 그들이 ‘밥풀때기’라고 불렀던 날뽀팔이 노동자들이 섞여 있었다. 김소진이 포착하는 것은 경찰과 시수대의 대립이 아니라, 80년대식 사회운동의 열기가 마지막으로 타오르던 5월 투쟁의 현장에서 벌어진 운동권과 밥풀때기의 대립이다.

당신들 밥풀때기들 때문에 민주화시위가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는 줄이나 아쇼? 당신들 도대체 누구, 어느 기관의 조종을 받고 이런 망나니짓을 하는 거요? (...)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저런 밥풀때기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마침 검찰에서도 수사의지를 밝힌 만큼 적극 수사에 협조해서라도 정화를 하든지 해야지 여론도 계속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민주화투쟁 하며 기껏 고생함시러도 시상에 밥풀때기가 뭐라요, 얼통 터지게. 사람이 입성이 누추하고 행동이 거칠다고 그렇게 깔보는 경우가 제대로 된 경우라요? 아 우리가 기생충이라? 민주화투쟁 하기 전에 저런 고상찌들하고 먼저 외장창 환관 붙어야지라. (...) 야당 사람들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의 시위로 옮겨왔는데 우리들이 학생들과 달리 움직인다고 해서 기층 민중인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우다.³⁵⁾

인용문은 검찰이 “백병원과 시위 현장에서 민주시민을 가장한 폭력배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선동”(77)하는 것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수대 내부에서 벌어진 충돌의 한 장면이다. 처음에 인용된 것은 ‘한국은행 서부투자금융 홍보실’ 대리로 일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그는 병원에서

35) 김소진, 『열린사회와 그 적들』, 문학동네, 2002, 71~72면. 이후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에 쪽수만을 밝힌다.

폭력적 행위를 일삼아 민주화운동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밥풀때기’들을 색출해야만 대중의 여론이 사수대 쪽으로 기운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주장에는 왼손을 공장의 ‘프레스 밥’으로 내주고 손수레를 끌며 살아가는 강중천씨가 “한국은행을 불태우러 가지는 얼토당토않은 발언”(80)을 한 것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다. 두 번째 인용은 이에 대한 강씨의 반발로,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하며 함께 고생한 자신을 밥풀때기 취급하고, 야당 정치인도 운동권 학생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섭섭함을 토로한다. 그리고 그 발언은 “배고픈 사람 구제하는 건 고사하고 재벌들 돈 대줘서 땅투기나 허게 하고 알 만한 사람에게 떡고물 잔치나 베푸는” 은행을 없애는 것이 “시상이 변하는 데 보탬이 될 거란 짧은 생각”(81)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부연한다.

위의 장면은 운동권 내부에 존재하던 ‘곤경’의 한 지점을 그리고 있다. 주지하듯 1980년대 역사의 주체로 호명된 ‘민중’의 중심에 ‘노동자’가 있었다. 저항세력이 담론의 장에서 출현을 기대하며 구성했던, 계급의식으로 각성된 노동자, 과학적·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노동자는 혁명의 주도적 형상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대학생이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떠나 공장으로 들어감으로써 ‘노동자’로 존재를 전이했고, 이를 통해 자신 또한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에는 ‘노동자의 형상’을 끊임없이 빠져나가며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흩어져 있었다. 특히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담배를 구걸하고, 술에 취해 욕설과 폭력을 일삼으면서도 스스로를 ‘민중’이라 자처하는 이른바 ‘밥풀때기’는 당시 운동권 학생들에게, “민중이라는 우리의 순결한 관념적 형상을 어지럽히며 불량하게 일탈하는 잉여였으며, 우리의 선한 의지와 정의에 의해 구축된 질서를 균열시키고 더럽히는 얼룩이었다.”³⁶⁾ 분명히 그들은 혁명을 주도할 노동자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동시에 자신들이 이룩할 혁명을 방해하는 ‘곤경’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36) 김영찬, 『민주주의와 그 적들』, 『비평의 우울』, 문예중앙, 2011, 110면.

빈곤은 비참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매우 친근한 경험을 통해 온갖 사유와 관계없이 빈곤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빈곤은 사람들을 신체의 절대명령, 즉 필연성의 절대명령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수는 이런 필연성의 규칙 속에서 프랑스 혁명을 지원하고자 무모하게 행동했고, 이를 고무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결국 혁명을 과멸로 치닫게 했다. 왜냐하면 이 다수는 빈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자, 필연성이 동시에 표출됐다. 결과적으로 구정권의 권력은 무기력해졌고 새공화국은 사산되었다. 사람들은 필연성, 생존과정 자체의 절박성 때문에 자유를 포기해야만 했다.³⁷⁾

한나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고찰하며 두 혁명에 대해 대비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거기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다수의 빈자들, 즉 ‘빈민’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혁명의 결과 프랑스와 미국 모두 새로운 공화국을 설립하고 국민의 대리자들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선언하는 성과를 이룩한다. 그러나 미국혁명과는 다르게 “신체의 필요에 찌든 빈자들이 우연히 프랑스혁명의 무대로 쏟아져 나왔”고, 이때부터 혁명의 목표는 더이상 ‘자유’가 아니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프랑스는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인 상켈로트의 권리 주장과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펼쳐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회귀하게 되는데, 이는 ‘빈곤’이라는 것이 인간을 ‘생존’이라는 필연성의 자리로 몰려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렌트에게 빈민은 프랑스혁명의 반동을 초래한 궁극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렌트는 자유의 두 개념인 ‘freedom’과 ‘liberty’를 구분하면서 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인 ‘liberty’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행위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즉 ‘freedom’의 공적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빈민은 ‘freedom’으로 이행하려는 혁명을 자꾸만 ‘liberty’의 영역에 속박시킨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삶의 조건이 ‘신체라는 필연성의

37)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136면.

절대명령'에 굴복하도록 함으로써, 빈민의 요구가 '자유'가 아닌 '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렌트의 이와 같은 논의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 형상화된 현실의 가난한 노동자, 즉 '밥풀때기'에게 가졌던 80년대 운동권 지식인의 양가적 감정을 잘 설명해 준다.

아렌트는 근대성의 중요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것'의 등장에 주목하는데, 이는 한 네이션의 구성원 전체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국민경제'의 영역이다. 새롭게 등장한 이 영역을 분석하며 그녀가 비판하는 핵심은, 국민경제를 다루는 일이 공적 영역을 잠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아렌트는 사회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경제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뚜렷히 구분하는데, 혁명과 빈민에 대한 그녀의 사유 또한 이러한 구분 위에서 서 있다. 그래서 아렌트에게 혁명은 '빵'의 문제가 제외된 'freedom'의 공적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때 빈민은 빈곤이라는 필연성에 묶여 사유할 수 없는 자,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는 빈민들의 '빵'에 대한 요구가 '자유'의 공적 영역을 확장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행될 수 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동 3권 보장'을 외쳤던 전태일의 목소리가 노동자의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확장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던 70-80년대의 한국사회가 단적으로 증명하듯, 빈민의 삶을 묶는 '빈곤'은 혁명의 반동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진원지가 아닐까?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공적 영역은 그리스의 '아고라'를 연상시킨다. 타인과는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들이 모여 공적 의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위대한' 정치적 행위의 공간. 그러나 그리스의 아고라가 가능했던 것은 생존이라는 필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을 노예들이 책임졌기 때문이며,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노예는 시민이 될 수도, 아고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80년대 운동권 지식인들이 호명했던 '노동자'가 공허한 개념인 것은, 현

실의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삶의 조건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다시 말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의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과 이를 변화시킬 방법과 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렌트가 제시하는 자유의 공적 영역은 공허하다. 그 영역은 어떤 이들에 의해, 어떻게 구성 가능한가? 거기에 빈민의 자리는 있을까?

여기서 열린사회라는 건 계급이나 종족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신화가 더 이상 개인에게 굴레가 되지 않고 개개인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질적으로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물질적 풍요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마당이며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눈뜬 다수에 의한 착실하고도 양심적인 사회 운영이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요.

당신네들 지금 자꾸 어려운 말을 씌시롱 머릿속을 헛갈리게 하는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우리, 우리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깰 수 있는 축은 누가 되는 거요? 이데올로기의 신화나 이성적 원리니 하며 거창하게 빚어내는 사회라면 우리 같은 못 배우고 백줄 없는 떨거지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게 볼 보듯 뻔한데, 뭐가 진정한 사회란 거요?(86)

사수대의 한 민주시민에 의해 설명되는 열린사회는 여러 면에서 아렌트의 공적 영역을 떠올리게 하는데, 결국 ‘밥풀때기’는 열린사회의 ‘적’으로 규정되며 90년대 초입의 ‘정상화 된’ 한국사회로 진입하지 못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의 현장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이들이 그 투쟁이 이룩한 사회로부터 밀려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고 비이성적인 ‘밥풀때기’는 민주적 질서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의 적합한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진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공권력에 무참히 숨진 우리의 순결한 동생 귀정이”(84)의 죽음과 밥풀때기 ‘상선’의 죽음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운동권 내부에 존재하던 배제의 논리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상선의 사인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밤무대에서 섹스폰을 연주하는 악사였던 상선은 “명동성당 앞 공중전화 박스를 깨뜨리고 그 유리조각으로

자해 소동”(79)을 벌여 대책위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샀으나, 사실 그것은 시위 도중 “최루탄 파편이 살 속을 파고든”(80) 것이었다. 이 상처를 입은 후 백병원 스티로폼 바닥에 누워 죽은 듯이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것이 상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된다. 다른 하나는 상선의 죽음을 ‘두 줄짜리 기사’로 요약하는 ‘ㄷ일보 경찰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다. 그에 따르면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에 있으나, 상선은 “땀감을 구하기 위해 공사장 담을 넘다가 지름 삼 미터의 환기통에 발을 헛디뎈 미끄러지는 바람에 실족사한 것으로”(89) 추정된다.

이로써 상선의 죽음은 김귀정과 같은 열사의 죽음으로도, 한 개인의 평범한 죽음으로도 포섭될 수 없는 불가해한 중간 영역에 놓이게 되며, 이 영역은 바로 80년대 한국의 거리와 광장 곳곳에서 민주화를 외쳤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상화 된’ 한국사회로부터 배제된 목소리들의 자리이다. 그리고 죽기 전 상선의 잠꼬대를 통해 그 목소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저놈 잡아라…… 적이다 적…… 난 시민이야…… 문 좀 열어 달라고…… 나 좀…… 헉헉…… 내게도 열어줘…… 아으……”(82)

5. ‘아무도 아닌 자’의 민주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은 각각 민주열사와 노동열사로 분리되어 국가의 역사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는 상이한 길을 걷는다. 오월광주가 공식 역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광주시민들의 죽음을 재현하는 자리에 국가가 들어서게 된다. 89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고, 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는 과정을 거쳐, 2002년 ‘5·18 국립 묘역’이 조성됨으로써 오월광주는 국가가 기념하는, 국가를 위한 죽음으로 재현된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각성-참여-투쟁-고난-극복-승리-보상-공식화-화해’를 골조로 하

는 공식 서사 속에 오월광주를 위치시킴으로써 광주시민의 죽음은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숭고한 죽음으로 재평가된다.³⁸⁾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는 곧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오늘날 오월광주는 80년대 반정부운동의 원-사건으로서의 힘을 잃고 국가의 공식기억 속으로 포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맑스주의, 레닌주의와 결합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를 향한 혁명운동으로 전이되었고, 90년을 전후해 일어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운동의 전망을 상실함으로써 쇠락한다. 생존권 보장과 노동해방의 요구들은 전방위적 세계화와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가난할 자유’로 수렴되었고, 개인, 자유, 욕망, 타자 등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90년대 담론의 홍수 속에서 노동자들의 죽음도 점차 재현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기억에서도 사라진다.

죽음의 재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일련의 과정은 죽음에 몇 개의 고유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역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의 전형적 결과이다. 역사의 주체가 ‘국가’이든 이에 저항하는 ‘민중’이든 이때의 죽음은 역사의 발전이라는 냉혹한 평가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죽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포섭되거나 역사의 걸림돌로 배제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몇 개의 고유명만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죽음을 망각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죽음의 고유명들 아래에는 정치적·역사적 이념으로 승화할 수 없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수다스러운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침묵해가는 별개의 이야기”³⁹⁾가 있다.

<명성 그 6일의 기록>과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 동일하게 아로새겨져 있는 형상은 ‘아무도 아닌 자’들이 외쳤던 ‘민주화’이다. 혁명에 자신의 삶과

38) 김항, 『국가의 적이란 무엇인가-광주의 기억과 에티카』,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304~309면.

39) 도미야마 이치로, 『전장의 기억』, 임성모 옮김, 도서출판 이산, 2002, 93면.

꿈을 걸었으나 꿈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와 꿈이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 그들의 망각된 꿈과 잊혀진 기억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 기록되지 않아 호명할 수 없고, 파편으로 존재해서 명명할 수도 없는 이 흔적을 수집하는 작업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실패가능성을 깊이 내재하고 있으나, 지금의 우리가 전망을 기대하며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김동원, <명성 그 6일의 기록>, 푸른영상, 1997.

김소진, 『열린사회와 그 적들』, 문학동네, 2002.

2. 논문 및 단행본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광주광역시 5·18자료편찬위원회, 1997.

『광주5월민중항쟁』,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풀빛, 1990.

권명아,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김영찬, 『민주주의와 그 적들』, 『비평의 우울』, 문예중앙, 2011.

김 원, 『전태일 분신과 ‘노동열사’ 탄생의 정치』,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김재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정환, 『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 도서출판 이후, 1998.

_____,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김 향, 『국가의 적이란 무엇인가』,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민주화의 길』 1-16호 합본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1987.

정근식, 『임을 위한 행진곡-1980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

조정환, 『공통도시-광주민주항쟁과 재현권력』, 갈무리, 2010.

- 조희연,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2001.
-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대상으로』, 『문학과학』 74, 문학과학사, 2013.
- , 『죽음과 정치, 자살의 문화정치 1·2』, 『말과 활』 4·5, 일곱번쨌숲, 2014.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 도시야마 이치로, 『전장의 기억』, 임성모 옮김, 도서출판 이산, 2002.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 알랭 바디우, 『윤리학』,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수일 옮김, 도서출판 강, 2009.
-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3. 신문기사

- 『계엄사령관 이희성 담화문』, 『경향신문』, 1980.05.31.
-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37명 내란음모 혐의』, 『경향신문』, 1980.07.04.
- 『인간의 생명은 모든 가치 위에 있는 것』, 『동아일보』, 1986.05.21.
- 『과격은 민주화에 역행: 분신점거 선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아일보』, 1986.05.22.
- 『좌경을 직시하자⑥ 오염되는 대학가』, 『경향신문』, 1986.10.22.
- 『민주화 위장, 복귀노선 수용』, 『경향신문』, 1986.11.13.
- 『이한열군 전국민의 애도 속에 잠들다』, 『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7.08.09.
-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조선일보』, 1991.05.05.
- 『죽음에 배후세력 있다』, 『조선일보』, 1991.05.10.

4. 인터넷 사이트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홈페이지
<http://www.yolsa.org/>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kdemo.or.kr/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
- 다음영화 홈페이지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37305>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Aspect of 'Death' in the 1980's

Kang, S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 of 'death as an event' that was caused by the violence of the state in 1980's. In particular, it was noted that a dual strategy of subordination and exclusion, in which representation and remnant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the field of representation surrounding death, was activated, and the following two studies were conducted. One is the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 aspect of deaths in the 80's by the power of domination and the resistance of the protesters on the subjec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bodies' statements, condolatory addresses, and proposition addresses, etc. In particular, this study set the boundaries between the 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 and the people's community, and examined the strategy of symbolizing death as 'non people' and 'martyr' in the political plans of those seeking to restore and overthrow the sovereign power of the community. The other is Kim So jin's novel,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which symbolizes the remnants of death, which is excluded from the proper noun, and Kim Dong won director's documentary, "Myeongseong, Records of Six Days," which shows the struggle for aggression in Myeongdong Cathedral at the time of the June Uprising. In this process, this study explored the existence of the 'poor' and the value of 'democratization' they dreamed of, which was treated as a plight of revolution in the dominant discourse after the June Uprising in 1987.

Key Words : 5 · 18, death as an event, non-people, martyr, democratization, <Myeongseong, Records of Six Days>,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강소희

소속: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edujui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년 1월 14일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0일